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MB 언론 장악의 재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치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더니, ‘방송 장악’이라는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야 말았다.

혹자는 이번 인사를 두고 ‘MB 언론장악 설계자’의 귀환이라고 말한다. MB 정권의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내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언론장악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 바로 이동관이다. 미디어법 날치기와 보수 족벌언론 종편 허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낙하산 반대 투쟁 YTN 기자 6명 해고의 배후가 그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자 10명 중 8명이 이동관 임명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란 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언론 자유의 암흑기를 이끌었던 ‘MB의 입’. 그를 기억하는 언론인들 사이에선 우려를 넘어 절망과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아들 학폭 사건은 어떠한가? 서울시의회 등 조사 참여자들이 “학폭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동관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국 11개 대학에는 “친구의 머리를 300번 박고, 침대에 눕혀 밟기까지 한 이동관의 자식은 학폭위 한 번 열리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고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아 아무 이상 없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함량 미달, 자격 부족의 이동관을 수장으로 지명하기엔, 6기 방통위 앞에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상파 방송사 및 지역민방 재허가, YTN 민영화 강행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 서울시 지원금 중단에 따른 TBS의 정책 방향도 내놓아야 한다. 디지털 혁신과 AI 혁명이 휘몰아치는 방송통신 시대, 디지털 격차 확대로 또 다른 불평등을 양산하는 시대, 책임자가 와도 모자랄 판에 분란만 키울 비전문가를 지명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불러낸 인물이 고작 이동관이라니. 이 정권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는 윤석열 정권의 몽니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진영과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물불 안 가리겠다는 조바심마저 느껴진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얼토당토 않는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당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2023년 8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